

**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은
현재 국회 본회의 계류 중으로,
정부는 신고포상금 제도의 중대재해 예방효과를
높일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.**

1. 관련 기사

□ 9.10.(목) 세계일보, “산재 신고 ‘5만원 포상금’ 신설”

- 고용노동부가 건당 5만원의 산업재해 신고 포상금을 신설한 계획이다.
1인당 신고 횟수 제한을 풀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를 이행하느라 예산
절감을 위한 고육책을 짜낸 것으로 보인다.
- 고위험 경우는 500만원, 찢림 등 고위험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예방이
필요한데도 조치를 안 했을 때는 신고 시 5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.

2. 설명 내용

-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은 현재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
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개정안에 따른 제도로,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향후
국회 심의과정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임
- 정부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위반
행위의 경중과 법령상 제재 수준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
정할 예정임
-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위반 등 고의적이고 중대한 법령
위반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포상금을,

-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6대 고위험 유형* 관련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(내년도 정부안 편성안 기준)

* ①떨어짐, ②끼임, ③부딪힘, ④깎림·뒤집힘, ⑤맞음, ⑥화재 등

- 아울러, 그 밖에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보건조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금액* 등을 고려하여 5만원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음

*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과태료 부과 최저기준액: 5만원

- 따라서, 5만원 포상금 신설 검토는 신고 포상금 제도의 대상을 넓혀 중대재해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서, 신고 횟수 제한 폐지에 따른 예산 절감과는 무관함

- 정부는 향후 법 통과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급기준과 운영체계를 면밀히 마련하겠음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	책임자	과 장	박상원 (044-202-8901)
		담당자	사무관	박대정 (044-202-8929)